與 개헌 논의 군불때기에 野 '시큰둥'

한나라 김무성 특위 구성 제안… 민주 일단 부정적

정치세력간 이해 엇갈려 개헌론 탄력 받을지 주목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987년 탄생한 지금 헌법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다원화·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를 개혁,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18대 국회 후반기에 최대 쟁점이 '개헌'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의 시대변화를 헌법에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시정해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인 한나라당 주류 측에서 적극적이고, 민주당도 이에 호응하는 양상이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은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면 한다"며 "이를 뒷바라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물론, 지금 당장 개헌 논의가 급속히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6월 정국은 6·2 지방선거 이후 당내 문제 수습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개헌 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칠 것이어서 당장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

민주당도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의 제안에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6월 국회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정략적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이번(6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6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적절치 않고 지금은 민생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헌론을 점화시키면 전선이 흐트러져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헌 논의가 점화되더라도 정치세력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쉽사리 성사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지만 여야 내부의 주류·비주류 간, 대권주자 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권력구조 개편론이 개헌 논의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개헌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여권 주류 일각에선 개헌을 통해 정치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닌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점 개헌론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고려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세종시 수정계획 변경 없어"

4대강 사업도 기존 입장 고수

청와대는 9일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라 세종시 수정 계획을 변경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설'과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 전략을 변경해 대안을 검토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른바 출구전략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모도 "(세종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는 수정안 아니면 원안이라는 생각이고 결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회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라며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플랜 B', '플랜 C'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책라인 핵심참모는 "4대강은 이미 국회에서 결정을 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로서는 계획에 변화를 줄 요인이 없어 공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각계의 의견은 계속 적극적이고 겸허하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세종시 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할 경우 세종시 수정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주민이 반대하면 무리할 수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세종시 문제를 포함해 정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으며 보도 내용과 같은 세종시 관련 수정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남구 보궐선거 저울질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7월 28일 치러지는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10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 참여 여부'와 관련, 공천을 전제로 한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이 부지사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출마 의사를 묻는 지인들에게 '공천을 준다면 누구든지 나가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말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면 (당선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남구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방법을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인 만큼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지사는 담양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전문가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때마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합리적인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 사이에 신망이 두텁고 지방은 물론 정부 각 부처에도 많은 인맥이 포진해 있어 전남도와 중앙 정부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평민당 등 급조 정당 존폐 기로에

유권자 주목 못받아 지방선거 참패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한 평화민주당(평민당)과 국민중심연합(국민련)이 선거 참패로 존폐를 고민할 위기에 몰렸다.

동교동계의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평민당과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만든 국민련은 각각 민주당과 선진당의 텃밭인 호남과 충청에서 대안세력을 자처하면서 지방선거 후보를 냈으나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유권자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

평민당은 전남·북과 광주, 인천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 각급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1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국민련도 대전·충남에서만 기초단체장 7명을 포함, 모두 55명의 후보를 냈지만 공주시장 1명, 기초의원 2명 등 3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양당 안팎에서는 당의 존립 문제와 두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일단 창당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최대 패인으로 꼽으면서 일단 '당을 추슬러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김정현 평민당 대변인은 9일 "한화갑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전국에서 뛴 후보들과 당원을 생각해 일단 추스르고 가자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광식 국민련 대변인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국정치에 새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내주 안에 지방선거 후보자와 지도부 연찬회를 갖고 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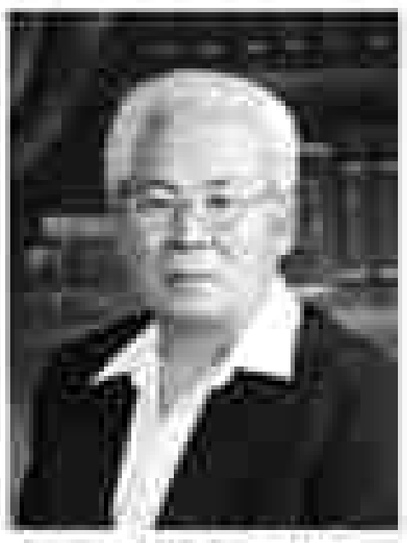
선진당 이회창 대표 사의 한시적 대행 체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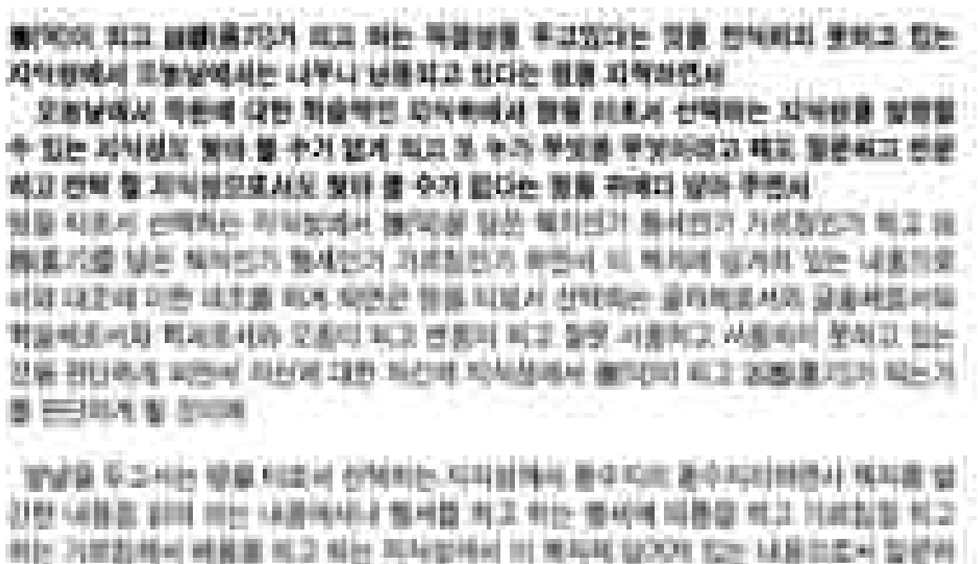
자유선진당이 이회창 대표의 사의 표명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행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표 유고시 최다 득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대행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10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변웅전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복귀시까지 당무를 집행하게 된다.

변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긴급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대표의 조속한 복귀에 최선을 다하기로 거듭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이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당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대행체제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드디어 입을 열다!

정날에서나 오늘날에서나 영웅 지도서 선택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공에 대한 공정난이 아니고 정에 대한 정정난이 아니라 바로 지인으로서부터 가정적으로서 사회적으로서 나라적으로서

정가 35,000원

유남출판 전자도서 (062)971-0800

한상제작중인 경제상 생활사 010-3159-5001

자주사 전국출판사업협력회

대구 011-353-2605

서울 010-4129-4129